



---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규정 신설기념 ·

## **학생인권 내용 및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 일시 || 2008. 4. 30.(수) 14:00 ~ 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일 정 표

전체 진행 : 김철홍 (학교교육팀장)

**기념이벤트** ..... 13:30

- 【행사1】 스티커 설문 : 학생인권에 대한 진단 설문
- 【행사2】 인권나무 만들기 :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상상 - 리본 달기

**제1부 개회식** ..... 14:00

- 개회 선언
- 개회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념사 : 최순영 제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축 사 : 권혜진 홍사단교육본부사무처장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표
- 경과보고 :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제2부 발표와토론** ..... 14:30

진행 :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 【주제1】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
- 【주제2】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지속화 방안 모색

- 인권교육단체(20분)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 어린이·청소년단체(30분) : 김종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김무곤(대한민국청소년의회),  
공현(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임송자(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교육단체(15분) : 권혜진(홍사단교육운동본부),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학부모단체(15분) :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숙환(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휴식시간 - 10분】
- 교원단체(15분) : 천희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진우(좋은교사운동)
- 교육관리자(15분) : 전상룡 (동덕여자고등학교), 이수광(이우학교)
- 관련부처(20분) : 오기열(교육과학기술부), 문병호(보건복지가족부), 송요원(용산고등학교)
- 【질의응답 및 토론 - 40분】

**제3부 종합토론** ..... 17:30

-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마무리 인사





# 목 차

<b>제1부 개회식</b> .....	<b>1</b>
■ 개회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3
■ 기념사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5
■ 축 사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표) .....	7
■ 경과보고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9
<b>제2부 발표와토론</b> .....	<b>17</b>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	19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김종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41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45
■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47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의 역할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51
■ 뒤로 가는 학생인권 정책 (권혜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	55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61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단체의 역할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64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67
■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의 실현을 위한 제안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69
■ 학교는 상급관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	73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전상룡 동덕여자고등학교) .....	77
■ ‘학교문제’에 대한 인권맥락적 사고 실험 (이수광 이우학교) .....	81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오기열 교육과학기술부) .....	85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문병호 보건복지가족부) .....	89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각 기관(단체, 교원, 활동가)의 역할 (송요원 용산고등학교) .....	93
<b>【참고자료】</b>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안)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중 발췌) .....	103
■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201



# 개회식

- 개회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념사 : 최순영 제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축사 : 권혜진 홍사단교육본부사무처장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표
- 경과보고 :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 신설을 기념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일선학교 선생님과 60여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학생인권조항이 신설되기까지 헌신하신 최순영 국회의원님과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소년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보장 의무조항 신설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학생·학부모·교사 교육주체와 여러 기관·단체 모두의 눈물과 땀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으로, 학생 인권 발전사의 희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고통이 겹겹이 쌓인 무거운 돌탑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 인권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소외계층이 누려야 할 권리 인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나라의 ‘미래’, ‘보배’, 또는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좋은 꿈을 가져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꿈을 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는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우리 입시제도 하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재 신설된 제18조의 4호가 선언적 조항으로 규정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 신설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 신설을 기념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공유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육주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고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학교 내 인권문제를 하나하나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국제인권규약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하였듯이, 학생인권보장 조항도 선언적 조항일지라도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이해 당사자와 관심을 가진 단체·개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맺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는 이렇게 교육 주체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인권향상이란 책무를 가장 무겁게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내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생명의 꽃 피우지 못하고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가신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학생인권조항 신설에 고생하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정부기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참석하시어 학생인권을 위해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 신설에 맞추어  
상호 협력을 통한 법 내용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진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는 것이 전교조가 창립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강령 중의 하나입니다. 이 속에 학생 인권을 무엇보다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어릴 때 내 꿈은 좋은 선생님 되는 거였어’라는 노래 가사는 교사와 학생은 본질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1주일이 멀다 않고 과도한 학생 체벌이 거론되는 언론 기사를 보고 당혹감과 죄송함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미숙한 존재이기에 항상 조심하고 상호 격려를 하여야 다소나마 성숙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 말에 제정된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제목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여 온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성취물이며 이 속에서 전교조도 자신의 몫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버클 달기,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기, 국회의원 면담, 성명서 발표, 우편물과 팩스 보내기, 홍보물 발간 등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든 분의 노력에도 학생인권법은 처음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한편 되돌아보면, 우리의 권리장전인 헌법이 이미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번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학생인권법의 불완전성은 인권이란 법 제도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협력으로 이루어짐을 새삼 알려주려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다소 늦게나마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 신설의 기념식을 하고 이 내용의 구체화와 내용 실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초부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결국 이러한 문화를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통찰력 있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신뢰를 보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전교조는 힘이 닿는 대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김무곤

학생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선거로 당선된 전국 100여명의 청소년의원들이 청소년들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청원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자문위원이신 최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도록 그리고 학습자율권과 학생회 법제화, 정치참여권 등이 보장되도록 입법청원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청소년단체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축하만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위 법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더 이상 학생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3월 1일 시행된 이 법이 아직 학교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한 고등학교에서는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바리깡으로 머리를 강제로 깎이고, 집단체벌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아직 법이 교육현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의 입학식을 축하하며 우리는 인권이 교문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등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를 하며 고민을 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인권이 교문을 등교할 수 있게 된 입학식을 취를 것에 축하를 하며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규정 신설 경과 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천희완

- 2006년 3월 13일(공식적으로 접수된 일자임) : 최순영 의원 등 10인이 제안함.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의안번호 174042)을 제안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생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8가지에 걸친 내용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킴. 법안 제기 의원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유승희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 2006년 3월 13일 : 경남도민일보가 학생인권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함
- 2006년 3월 25일 : '학생 인권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학생인권법안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임.
- 2006년 4월 12일 : 경향신문이 3월 9일에 이어 4월 12일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가칭 학생인권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사설을 게재함
- 2006년 5월 14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5·14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두발 자유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 개선을 촉구함
- 2006년 6월 28일 : MBC TV에서 '체벌 금지'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냄.
- 2006년 6월 29일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홍사단교육운동본부)가 국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체벌 근절을 위한 학생인권법안 법제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06년 6월 29일 :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학생에 대한 일체의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법안이 논의되기를 촉구함
- 2006년 6월 30일 :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최근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학생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함
- 2006년 7월 5일 : 한겨레신문이 김희승 논설위원의 『[아침햇발]체벌의 추억』을 실어 체벌의 문제점을 부각시킴
- 2006년 7월 11일 : 정부는 지난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에게 성범죄나 심각한 폭력 및 체벌을 휘두른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해임 파면 정직 등으로 정하기로 하여, 과잉체벌 교사 징계를 대폭 강화함.

- 2006년 8월 8일 :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만들기> 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아수나로, 청소년의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선 한 목소리로 학생인권법 통과에 나서겠다고 발표함
- 2006년 8월 14일 : 청소년 인권활동가 10여명이 '두발자유화와 학생인권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전국 6개도시 순회 전국 행진에 나섬. 이들은 지난 14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의 출발을 알렸음
- 2006년 8월 14일 :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옷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때린 일이 발생함. 당시 이 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가 지각한 옆반 학생 2명을 각각 100대와 200대씩 때렸으며 맞은 학생 중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함
- 2006년 8월 15일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두발자유화와 학생인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음
- 2006년 8월 17일 : 8월 17일 울산에 도착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참가자들'이 중구 차없는거리에서 '청소년 두발자유화와 학생인권법 통과'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하였음.
- 2006년 8월 18일 - 29일 : 『'학생체벌 금지' 법제화』 논의에 대한 글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등에 실림.
- 2006년 8월 25일 :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의 '교사체벌 금지 법제화돼야'의 글이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게재됨
- 2006년 8월 30일 : 여야 의원 21명이 학생 체벌과 두발 규제의 법적 금지를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 관련 입법을 추진기로 함. 열린우리당 강혜숙,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금지·두발자유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한다고 밝힘. 이 의원모임에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 민노당 9명이 참여함.

- 2006년 8월 31일 :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학생 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학교가 인격적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생활·학습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2006년 9월 12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학생인권법안 제정, 학교자치법안 제정 등 3대 입법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힘
- 2006년 9월 16일 :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촛불문화제' 행사를 진행함.
- 2006년 9월 24일 : 창립 93주년 기념 전국 홍사단(이사장 구치모)대회 과정에서 9월 23일에 전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학생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함
- 2006년 11월 2일 :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학생인권법통과를 지지하는 1000인 선언자가 함
- 2006년 11월 2일 : '77돌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교사 선언'을 교사선언 참가자(전교조분회장 5,071명)가 함
- 2006년 11월 2일 : 전북 전교조 '학생인권 지킴이' 선언.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박병훈)는 2일 오후 4시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사들이 앞장서 학생인권 지킴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함.
- 2006년 11월 2일 : 대구 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시 제정당.각계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림. 참가단체 : 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등
- 2006년 11월 5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학생의 날(11월3일)을 기념해 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자유선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학생회 대표들의 100인 선언이 이루어졌음
- 2006년 12월 22일 : 『학생인권법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됨. 장소 : 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주관 :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공동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민주고등학생연합,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YWCA전국연맹, 홍사단

- 2007년 1월 27일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교육기본법 개정 관련 입법청원서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한 활동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실시함. 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12조 2항에 '학습의 자율권(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의 선택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에 서명을 받음. 정치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제12조에 '학생들의 사회참여·단체참여'를 보장해 주자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음
- 2007년 2월 15일 :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조지연 의장 외 860인이 최순영 의원의 소개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권 보장 규정'을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제기함. 2)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조지연 의장 외 730인이 안민석 의원외 3인의 소개로 '학습자가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율권 보장 규정'을 교육기본법제12조제2항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제기함. 3)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4년 1월 27일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이 청소년의회 의결을 토대로 황우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에 "당해 학교 학생대표"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한 바 있음.
- 2007년 4월 14일 : “미친 학교를 혁명하자!”는 주제로 '제2회 청소년 인권행동의 날 집회'가 광화문 한국통신(KT) 앞에서 열려 학생의 인권 보장을 주장함. 주최기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2007년 4월 23일 : 제267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법안소위 회부'가 이루어짐
- 2007년 6월 9일 : 명동에 메카로 자리잡은 유네스코 앞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소속의 성진희와 학생인권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생인권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임

- 2007년 6월 13일 : 7,014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촉구 서명지를 법안 발의자인 최순영 의원에게 전달함.
- 2007년 6월 13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명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인권증진과 학교자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즉각 개정하라.'를 발표함
- 2007년 6월 13일 - 19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7,014명이 법 제정을 소망한 서명지를 각각 전달함(법 제정 시기인 11월 16일까지 '총 11,745명의 서명지'를 전달함).
- 2007년 6월 13일 - 25일 :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입법 촉구 서명활동,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국회교육위원회 자유게시판 글 올리기 집중 실천, 토론회, 의원 면담 등을 실시함. 참여단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 2007년 6월 20일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성명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학생인권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를 발표함
- 2007년 6월 25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명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보장과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즉각 개정하라.'를 발표함
- 2007년 9월 13일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공청회와 전체 토론을 하기로 함
- 2007년 9월 17일 : 제269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공청회와 전체 토론을 함. 공청회에서 전상룡 서울 동덕여고 교장과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토론을 함.
- 2007년 9월 28일 : 천정배 의원 소개로 『학생회 법제화,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내용의 입법청원(청원자 : 심성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함.



- 2007년 11월 15일, 16일 : 제269회 국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회부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 국회 제5,6차 위원회(2007. 11.15, 11.16)를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여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18조의 2, 3, 4항을 신설하였음. 법안심사소위 위원 : 열린우리당 유기홍, 김교홍, 이은영, 한나라당 임해규, 김영숙, 이주호
- 2007년 11월 16일 ~ 12월 14일 : 제26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음(11월 16일). 법사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음(11월 23일). 제269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음(11월 23일).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됨(11월 30일). 법안이 공포됨(12월 14일)

#### <학생인권법안 중 반영되어 제정된 법안 내용>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18조의3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2007년 11월 27일 : '현재 통과된 학생인권 보장 조항의 내용 구체화와 학생인권법안 원안 내용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발표단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 2008년 4월 30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학생의 인권보장)' 제정 기념식 및 법안 내용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발표와 토론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김종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의 역할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뒤로 가는 학생인권 정책 (권혜진 홍사단교육운동본부)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단체의 역할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의 실현을 위한 제안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교는 상급관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전상룡 동덕여자고등학교)
- '학교문제'에 대한 인권맥락적 사고 실험 (이수광 이우학교)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오기열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문병호 보건복지가족부)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각 기관(단체, 교원, 활동가)의 역할 (송요원 용산고등학교)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 학생 인권, 글썄...

학생은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학생에게  
만 맡겨둬?

요즘 아이들이 얼마  
나 거친데... 학생  
인권보단 질서와  
예의를 가르치는  
게 우선이지...

## 학생 인권, 글썽 ...

교육자치 실현 차  
원에서 학생인권  
도 학교 단위의 자  
율에 맡겨두는 게  
최선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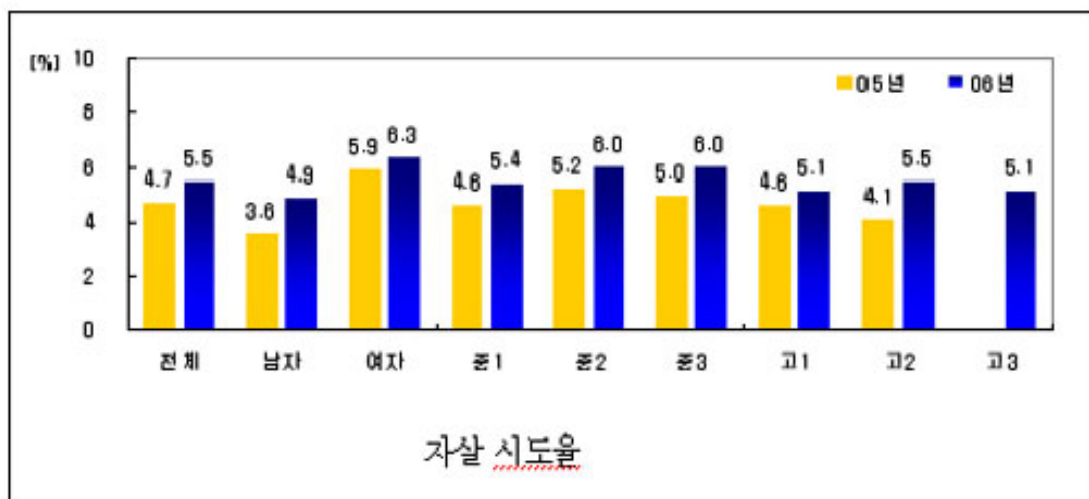
학생도 학부모도  
성적에만 목을 매  
는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우선이지 ...

## 학생 인권, 글썽 ...

학교와 교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  
하는 거 아니야?  
자원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

학생 인권도 중요  
하지만 교권도 중  
요해, 교권 위축 문  
제는 왜 얘기하지  
않는 거야?

# 사람과 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길



우리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2007년 3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혹한 경쟁과 우애 교육의 실패가  
누구를 잔혹한 결과



인권에 기초한 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

- 국가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
-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 : 학생이 인권을 배우고 행사할 수 있는 교육
- 신뢰에 기반한 교육
  - :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 보호로부터 출발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상호 의존성

## 인권에 바탕을 둔 교육, 기억해야 할 지적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1996+2003)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 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 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91년 한국정부 가입)

제29조 (교육목표)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 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 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쇠말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 조약기구들의 일반논평
-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안과 선언
-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 친화적 학교' 지침 등에서 뒷받침 기준들을 뽑아냄

##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체벌, 복도에 엎드려 반성문 쓰기 등 모욕적인 처벌
- 언어폭력
- 무작위 소지품검사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 부모의 동의와 학생의 동의
- 강요된 보충/자율 학습
- 학생을 배제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
- 강제적인 행사 동원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성적 우수자에 대한 차등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배제
- 성별, 학년, 성적, 성정체성, 가족형태, 가족의 경제적 지위 등에 근거한 차별을 묵인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 4. 감당할 만한 교육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 경쟁적 교육, 과중한 학습 부담
- 동료 고발 유도
- 학생선수, 학생인가 운동기계인가
- 학습권의 자의적 박탈과 전학 강요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하여 이뤄져야 하고...”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종교 강요
- 학생 매체, 서명, 표현물 규제
- 휴대폰 일괄 수거, 소지 금지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대받는 아동의 존재
- 일하는 청소년의 피해 증가
- 모든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고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

##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보살핌과 자유의 동시 존중”

- 좋은 먹거리 제공 & 강제 급식
- 건강 검진 & 건강정보 유출
- 안전사고 예방 & 쉬는 시간 통제
- 빈곤학생 지원 & 모욕적 대우



“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23항



##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학생 인권은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 사회구성원들에게 닫힌 학교
- 성폭력, 학대 등 폭력피해 학생, 치유, 법률지원이 필요한 학생 방치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해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 교사의 지위 보장 미흡(특히 사립교원)
- 교사의 인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지원 부족
- 회색 영역의 학생 인권 기준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유네스코 다카르 행동 계획 69-70항



## 10. 권리를 회복할 권리 보장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의제기 포기
-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미제공
- 학교 명예 등을 내세운 불이익과 위협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01-104항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15가지 권리 지침

-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한 권리들을 학교현장에 대입한 세밀화
- 학생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제안
-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불러내는 주문
- 권리 주체로서의 학생, 옹호자로서의 교사, 책임자로서의 학교와 정부

## 1.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 헌법 10조/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28조 등

### • 학교규율

- 존엄성에 합치되는 규율
- 학생의 참여 보장과 의견 존중
- 판단을 돕는 정보, 규율의 공지

### • 강요된 교육 활동

- 강제된 학습 금지
- 학생 자신의 동의
-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

### • 언어 사용

- 언어 폭력의 금지

### • 학교밖 교육시설의 선택

- 적절한 시설 환경
- 시설 종사자의 태도
-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

### • 학생들과의 약속

- 책임있는 답변
- 약속의 성실한 이행

### • 학생 표현물의 이용

- 학생 자신의 사전 동의

## 2. 차별 금지

: 헌법 1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아동복지법 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3조/ 교육기본법 17조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 등

### • 차별 없는 학교

- 차별 근절 조치의 마련
- 성적 차별 금지
-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학년, 나이에 따른 차별 금지
- 빈곤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가출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 •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여성, 장애아동, 이주 아동, 성소수자 등)

-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 인권교육 실시
- 대표성 강화
- 폭력, 차별로부터의 보호
- 분리 교육, 교육 배제 금지
- 민감한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

### 3. 교육에 대한 권리

: 헌법 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28~29조/ 교육기본법 9조 등

#### • 교육 목표의 실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 경쟁적 교육풍도의 변화
- 교육의 계도를 벗어난 지도 중단
-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

#### • 교육과정과 정책 참여

- 교육과정 수립 참여와 알 권리
- 학교 운명에 관한 결정 참여
-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 • 교육 선택

-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택
- 다양한 진로 탐색

#### • 학습 환경

-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
- 학습 지원 물품 제공

#### • 학습권의 박탈

- 일시적 박탈 최소화
-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 4. 학생 자치와 참여

: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29조/ 초·중등교육법 17조/ 청소년기본법 2조, 5조, 47조 등

#### • 자치와 참여를 위한 기반

- 공간, 정보제공, 교육 등 여건 조성
- 학급자치 활성화
- 학교의 장 등과의 면담권

#### • 동아리 활동

- 설립, 가입 허가제 운영 금지
- 자유로운 운영 보장
- 예산 등 활동 지원

#### • 학생 대표 기구

- 임후보 자격 제한 금지
- 선출 과정의 민주성 보장
- 권한 확보: 예.결산권, 회의소 집권, 의견 전달과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타 학교 학생기구와 교류할 권리 등
- 사전/사후 간섭 금지

## 5. 신체의 자유

: 헌법 12조/ 교육기본법 1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 37조 등

### • 모욕적인 처우

- 체벌 금지
- 강제 이발 금지
- 기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

###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성폭력 금지와 예방
- 감정의 표현과 신체 접촉
- 강제 검진이나 의료 행위 금지

### • 강제노동과 행사동원

- 사적인 심부름 금지
- 행사 도우미 배치시 동의
- 정당성 없는 전체 동원, 할당 동원 금지
-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

### • 기숙생활

-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지
- 장기 학습과 부당 규율 금지

## 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헌법 19조, 20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4조 등

### • 양심에 반하는 서약

- 동의에 기초한 선서
- 반성문, 서약의 강요 금지

### • 일방적 생각 주입

- 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

### • 종교 강요

-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 예배, 종교교육 강요 금지

### • 도서 등에 대한 검열

- 특정 도서에 대한 소지 금지



## 7. 학생의 표현

: 헌법 10조, 2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3조, 15조 등

### • 용모 규정

- 두발, 복장의 자유
- 이름표,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 • 매체 활동

- 사전 검열 금지 등 매체 활동의 자유 보장
- 매체 활동에 대한 지원

### • 표현물과 의견 조직 활동

- 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 벽보 등 홍보와 선전 보장
- 설문조사, 서명 등 의견 조직 활동 보장
- 온라인에서의 의사 표현
- 공연 내용의 자유 결정

### • 교내외 집회

- 원천 봉쇄, 참여 불허 금지

### • 교외 활동 보장

## 8. 사생활과 개인정보

: 헌법 17조, 18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6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조/ 교육기본법 23조의3 등

### • 사적 기록물

- 일기장 검사의 대안 마련
- 편지 공개 금지
- 휴대폰 내용의 열람, 공개 제한

### • 개인 소지품과 공간

- 소지품 금지의 제한
-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 적법절차를 갖춘 검사
- 소지품 압수의 제한
- 사적 공간의 확보

### • 개인정보

- 과도한 수집, 유출 금지

### • 교육과정에서 기록되는 정보

- 성적 공개 금지
- 상담정보의 비밀 유지

### • 감시장비의 설치

- CCTV, 알림장치에 대한 제한
- 몰래 촬영, 녹음 금지

### • 관계와 소통의 자율성

## 9. 정보 접근

: 헌법 21조, 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2조/ 청소년기본법 15조 등

### •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

- 열람권
- 수정 요구 등 통제권

### • 성장을 위한 정보

- 가고 싶은 도서관
- 컴퓨터 이용권 보장
- 인터넷 활용 보장
- 정보 활용 교육

### • 참여를 위한 정보

- 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 투명한 학교 운영

## 10. 건강

: 헌법 34조, 35조/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24조, 27조/  
학교보건법 4조, 6조/ 학교급식법 등

### • 학교 환경

- 적절한 학교시설과 물품
- 위생 설비
-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

### • 정신 건강과 치유

- 상담.치유 활동의 활성화
- 상담 기능 강화
- 처벌이 아닌 치유 중심 접근

### • 몸이 아픈 학생

- 호소에 대한 존중
- 최적의 보건실 환경

### • 먹을 권리

- 학교급식의 질과 접근권 확보
- 학교 매점에 대한 감독

### • 건강 검진과 촉진

- 적절한 검진, 사생활 보장
- 체력시설 확보, 운동 강요금지

## 11. 안전

: 헌법 3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24조, 27조/ 청소년기본법 51조/ 학교안전사고예방법 등

- 교내 안전 사고

- 안전을 위한 설비

- 교외 교육활동시설

- 시설의 안전 점검
- 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 등하굣길

- 통학로의 안전 확보
- 통학수단의 제재 시 유의점

-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내실화

## 12. 쉼, 놀이, 문화

: 헌법 3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8조, 29~31조/  
문화예술교육진흥법 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 쉬는 시간의 향유

- 쉬는 시간의 보장
- 쉬는 시간 활용의 자율성
- 실내외 휴게공간의 확보

- 문화 활동

- 문화 동아리 지원
- 문화 관람의 다양성 확보
- 불합리한 활동 제한 금지

### 13. 사건 조사와 징계

: 헌법 12조, 13조, 2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 37조, 40조/ 초  
중등교육법 18조/ 행정절차법 22조 등

#### • 징계의 기준과 내용

- 규정의 정당성
- 권리 제한의 최소화
- 징계권 남용 금지
-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

#### • 사건 조사와 징계 절차

- 절차의 성문화
- 무죄추정
- 차별 없고 공정한 조사
- 모욕적, 비인도적 대우 금지

- 나이,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사려깊은 조사 절차

- 학생 자신의 변론권 보장
- 지체없는 통보
- 재심권 보장

#### • 정보 처리

- 공개 제한
- 보관된 기록의 주의깊은 관리

#### • 문제해결 지원

- 해결 지원, 은폐.축소 금지

### 14.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헌법 10조, 30조, 3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 32조, 34조, 36  
조/ 청소년복지지원법 12조/ 학교폭력예방법 14조 등

#### • 집에서 학대받는 학생

- 일시보호 등 구제 조치
- 2차폭력 등 추가 피해 예방
-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돌봄

#### •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

- 수사기관의 학교 방문시 제한과  
법률적 지원
- 추가 불이익 금지
- 관련 사실의 공개 금지

#### • 일하는 학생

- 아르바이트 등 노동권 보장
- 권리구제 지원과 노동권교육
-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 • 폭력 피해 학생

-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 피해 학생의 회복, 복귀 지원
- 제보자에 대한 보호
- 성폭력 예방 규정 성문화와  
폭력예방 교육



## 15. 권리를 지킬 권리

: 헌법 10조, 30조, 3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 32조, 34조, 3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12조/ 학교폭력예방법 14조 등

- **이의 제기**
  - 두려움 없는 이의 제기
  - 불이익 금지
-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보장**
  - 구체절차에 대한 공지
  - 교육청 민원,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당사자 신원 파악의 효과 주의
- **권리 구제를 도울 권리**
  - 목적 사실의 증언, 증거물 기록 등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지침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조건들...**



- 지침의 법적, 도덕적 권위 확보
- 독립성 있는 구제 절차 마련
- 인권교육
- 예산과 자원의 확보
- 법률 보완, 세부 지침 등을 통한 교육과 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책무 이행
- 학생인권 수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김종민

###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우리의 역할 (청소년단체)

1. 입시(교육선택권)
2. 두발 및 체벌을 학생인권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3. 학생자치활동(학생회&동아리 활동)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 1. 입시 및 교육선택권을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금지됐던 29개 조항을 폐지하는 학교자율화 정책을 세웠다. 학교자율화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0교시, 야자 및 보충 등 학생들의 기본 건강권 등을 해치는 요소들이 있다. 또한 우열반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일렬로 세우고 있다. 지난 학교자율화에 반대하는 4월 19일 촛불문화제에서 청소년들의 주요 구호는 “잠잠자자!밥좀먹자!우리는공부하는 기계가아니다!”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입시 때문에 가장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 구호이다.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인권적 침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인권 침해는 입시로 인한 기본적 삶의 억압하는 것이다. 어느 프랑스 학부모가 ‘대한민국은 거리에 아이들이 없다’고 깜짝 놀란 유명한 일화는 다들 한번쯤 들어봤던 얘기일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ㄷ부고에서는 고교선택제를 발표한 이후에 속칭 명문사학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치권과 행복권을 가로막고 있다. 공부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대 합격생 10명이 나올 때까지 축제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으며 수련회 또한 해병대 캠프로 간다. 그리고 최근 일부 사립에서만 강하게 적용됐던 규제도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고 고교선택제가 더욱

더 진행되면서 ‘모범생’을 요구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보내는 교육시간에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정책이 바뀌고,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수혜자로서 청소년들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교육정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봐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들은 더욱 더 입시에 학생들을 몰아가는 ‘학교자율화’ 반대운동과 그리고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0교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들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형 학교도 좀 더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 2. 두발 및 체벌을 학생인권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3월 한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코너에 광명시에 있는 진성고등학교 학생이 만든 UCC 한 편이 큰 화제가 되었다. 동영상은 주된 내용은 기숙학교 학생으로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의 시정을 바라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는 급식비에 비해 질 낮은 급식 강제적인 두발규제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에 대한 고충을 담았다.

이 UCC는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어서 순식간에 14만명 이상이 시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민주적인 두발규제가 비단 진성고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2005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등의 주최로 두발자유 촛불시위 개최 이후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두발제한 규정을 전교생 설문조사와 학교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지침에 명시된 설문조사를 아예 실시 하지 않는 학교를 비롯하여, 설문조사의 항목을 교사의 임의대로 하여 설문한 사례(서울 용산구 Y고교), 설문조사 후 한 동안만 두발을 검사하지 않다가 6개월 후부터 다시 교문 앞 지도와 체벌을 시행하는 학교(서울 구로구 U고교) 등. 서울 대부분 학교의 두발단속은 “선생님 맘대로”다.

이러한 형태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서울학생보다는 지방학생들에게, 인문계학생보다는 실업계학생들에게, 그리고 소위 명문고등학교라고 불

리우는 학교에서 보다 엄격하게 실행되고 있다.

체벌은 각 학교의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다. 체벌의 문제점은 체벌의 사용권한을 교사가 판단하는 점,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학생들이 체벌을 제지할 수 없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이를 참는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민주시민이 되기위한 의식><UN 인권헌장 - 신체의 자유><헌법- 행복추구권>을 배우지만, 정작, 학교내에서는 체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완전 무권리하다.

위와같은 내용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60여년간 지속된 교육방법으로 굳어진 관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은 교육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 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각 교실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요구하면, 형식적인 지침만을 내려놓고서 그 다음 일은 수수방관하는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학교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인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있도록 학교의 공문을 넣을 권리나 외부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것은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를 정착시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활동을 할 것이다.

### 3. 학생자치활동(학생회&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은 그 필요성이나 효과 면에서 이미 그 능력을 검증된 바 있다. 일본은 왕따나 학교의 몇몇 문제들을 학생자치활동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원의 모 고등학교는 입시교육을 강하게 시키면서 반대로 입시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는 도구로 학생자치활동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회를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했지만 실질적인 권리와 권리를 주지 않는다.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축제 때 행사를 기획하는 것 뿐이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의원회의도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 때 건의하는 몇몇 학생들의

건의마저도 학교장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에 통과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학교에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렵다고 해도 ‘어차피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의식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회에게 청소년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치적 권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구조를 만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지도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학생회 예산 및 집행을 학생회에게 넘기는 것, 대의원회의를 실질적으로 결정권 있는 회의로 변경하는 것 등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아리활동도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동아리 활동은 요즘 들어 더욱 더 인원수가 줄거나 폐부(동아리가 없어짐)를 당하거나 적극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 이것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반적인 상황이다. 심지어는 일부 선생님들은 ‘동아리에 가입하지 마라’라고 강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 예로서 전문 강사가 없거나, 동아리 활동공간이 없다거나 예산 지원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 스스로가 입시 압박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동아리 활동에 부담을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학생회 및 동아리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3년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상실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학생들을 입시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안에서 동아리를 지원하는 분위기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학교 안에 학생회 및 동아리 등의 자치활동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학생회의 전문강사가 학생회 활동의 노하우를 동아리 전문강사가 풍물, 영상 등 매체의 전문적인 것을 알려주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치활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외부에서라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라도 보장이 좀 된다면 학교는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욱 다닐만한 곳이 될 것이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표 김무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김무곤입니다.

저희 단체는 청소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청원활동을 6년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학생인권침해는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체벌, 두발규제, 강제자율학습, 자치활동 억압, 복장규제, 종교수업 등 학생들의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공부하는 기계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회사, 교도소, 군대로 비유하곤 합니다.

학교를 회사, 교도소, 군대로 비유하며 선생님을 상사, 교도관, 선임으로 비유하며 ‘복종만을 강요한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학생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른들로부터 보호만 받고 어른들에 의해 복종만 듣는 공부만 하는 인간인가요?

이들에게 인권은 뒷전의 일인가요?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이 가지는 권리조차도 못 가지는 건가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조차도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학생이었습니다. 교문에서 인권은 출입금지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비판을 하고 지금까지 부당함을 알려왔습니다. 여러 청소년단체들도 이에 청소년 입장을 대변하며 여러 집회나 퍼포먼스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이 바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학생인권보호법안은 아니지만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한 문장의 법안입니다. 우리는 환영하고 이 법안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인식에서 학생인권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인권침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선생님들은 당연한 듯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단체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학내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들은 앞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알려야 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청소년단체로 제안하는 것이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날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이 날 많은 청소년단체는 독립운동을 기리며, 현재 학생들의 현실을 알리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학생의 날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학생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것은 학생 인권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꼭 제정되었으면 하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비롯해 3.1 운동, 4.19 혁명은 어른이 아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숙한 우리 학생들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대 미숙하고 보호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학생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학생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놀리고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고 학생인권은 더 이상 붙어질 필요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활기찬 교사와 학생의 사이로 학교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밝은 교육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인권을 위한 전면적 변화의 계기가 되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학생인권 보장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주장해온 것 중 하나이다. ‘학생인권법안’의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와 이런 단체들의 긴 활동이 있었고,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의 서명운동과 이슈파이팅 등이 있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해온 한 사람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교육기본법상의 학생인권 존중·보호 조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선언적 조항만이 신설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국회의원 분들에게 법률에 학생인권의 내용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게 너무 구질구질한 작업처럼 느껴졌다면 차라리 시행령으로 만들도록 명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학생인권에 대한 선언적 조항 하나만 들어가고 심지어 본래는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생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조항도 도중에 빠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치적 눈치보기의 결과물이자 현재의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쭙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신설된 제18조의 4와 관련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실 계획(물론 처벌을 제한적으로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의 개정을 포함하여)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각자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생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가장 인권적인 내용을 담아 제시·보급·교육하고, 그 기준을 어기고 학생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일은 정부의 일일 것이며,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한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학교 현장의 구조 변화와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교사나 친권자(학부모)의 일일 것이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고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먼저 이런 여러 역할들 중에 청소년인권단체로서 할 일들을 고민해보니, 우선

이번 토론회에서도 발표된 학생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읽기 편하게 요약해서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요약본에는 이러한 인권들을 침해당할 때 어떻게 저항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지원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지 등등의 실천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활동들, 즉 학생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진 학교들을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고,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뭔가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사나 친권자나 청소년 등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할 테고….

추가적으로, 이번 조항 신설이나 다른 상황들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하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조항과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 학교의 교칙들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그러한 교칙개정이 교육부에서 “개정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많은 학교들이 “개정하겠다.”라고 보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을 수 있으며, 이중적 교칙(보고용 교칙 하나, 실제 교칙 하나. 학생들에게 교칙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가 학생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칙을 협의하여 재개정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알게 하고 그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칙이 만들어지는 데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 교사, 친권자, 그리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인권교육이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을 권고한 인권교육법의 내용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학생 본인은 물론 학생인권 문제의 관련자들 전체에게 인권 일반과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인권교육이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학생인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권적인 것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은 학교 단위의 자율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을 단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학교의 ‘자율’(이란 이름의 횡포)를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학교의 ‘자율’이나 ‘재량권’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자율’과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

교 단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겠으나, 학생들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학교와 교육체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 사회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권 기준과 함께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회를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중간고사 시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낮 시간에 연 것이 더욱 아쉽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의 역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송자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는 수직적인 관습과 선도규정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격, 재능,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 요구 및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아동은 곧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각종 법규는 규정하고 있다(김대유, 2008).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은 원숙한 인격 발달에 적합한 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제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정신 등 사회이상 테두리 안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과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대하여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03년 1월 한국정부에 권고의견으로 내놓은 교육부분 권고사항<sup>1)</sup>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한 번 더 소외받는 취약집단이다.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 이후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많기만 하다. 그런 중에 이번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과 학생인권 증진방안에 대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①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교칙 개정

②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③ 교사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

④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보장

⑤ 아동의 잠재성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감소, 정부의 교육정책 제고

첫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이다. 협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정부차원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NGO는 그 동안 꾸준히 해온 교육과 홍보를 통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본 협의회는 2005년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위탁받아 추진하였다. 그중 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으로 협약 내용의 인지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전국의 아동담당 공무원과 교사, NGO 실무자 그리고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초등, 중등, 고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동담당 공무원의 경우 49.7%, 교사 84.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관련 실무자만 80.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7.2%, 중학생 4.4%, 고등학생 2.3%만이 인지하고 있어 권리주체로서의 권리 인식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로 본인의 관심부족 및 국가 홍보부족을 지적하여 아동권리와 대한 사회적 홍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공무원과 NGO 실무자, 아동들은 대부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32.3%만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유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실현은 아동의 참여를 통해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GO는 지역, 학교, 가정에 있어서의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아동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요즘 선생님들은 은어 및 각종 욕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 욕을 들었을 경우 학생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우리 학교에도 욕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는 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 그 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모욕감을 준다. 또, 집에서도 잘 듣지 않

는 욕을 듣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분이고, 학교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화가 나시더라고 우리가 들어서 배울만한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아동권리 수호천사 활동보고, 2007)’.

이 글은 본 협의회에서 아동권리옹호를 위해 아동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권리 수호천사의 활동내용 일부이다. 아동권리 수호천사는 아동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평등, 차별, 폭력, 차별 등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다. 이를 통해 수호천사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안을 하고, 협의회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답변하거나 관련 행정부처로 연결시키는 아동참여의 마당이다.

또한 본 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의 참여보장과 주체적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동총회에 참여하는 전국의 아동대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아 정부에 제안한다. 그 동안 아동총회에서 결의된 결의문 내용 대부분은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모든 아동은 성적순으로 평가받지 않아야 한다
- 아동의 교육과 진로에 관한 것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아동은 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 아동의 교사평가제 참여보장
- 아동복지지도원 학교 파견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지원
- 장애아동의 교육시설 확대
- 통합학교 장애아동 전담교사 배치
- 지역간의 교육제도 차별 금지
- 외국인 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사들의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의 필요성
- 교사의 학생 징계권에서 신체 처벌 금지
- 학교폭력 교사의 자격 박탈

셋째,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아동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이다. NGO 모니터의 기능은 가정, 학교, 시설, 노동현장 및 사회전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협받고 있는지, 아동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아동들이 참여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는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아동권리 전반에 걸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평가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던 남녀 혼인연령이 남녀 모두 18세로 같아졌고, 협약의 유보조항이던 분리된 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민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입양허가제 철회와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NGO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상황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참여를 통한 학생인권의 실현일 것이다.



## 뒤로 가는 학생인권 정책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권혜진

### 인권 친화적 학교의 모습

아침 8시 기상 9시 20분 등교, 오전 4교시는 국영수와 과학, 사회, 역사 등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 3교시는 음악과 체육, 미술, 토론 등의 참여식 수업과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4지 선다형의 일괄적인 시험방식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수준에 맞추어 성장하는 맞춤형 시험이 좋을 듯하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졸업과 입학식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예산의 결정과 집행을 맡으며 축제를 열 수 있으며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안에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할 기초 지식과 민주적 생활 양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기고 개발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며 학부모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한다. 평교사 또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안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교사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소신껏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학교장은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지역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토론과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 것이 인권 친화적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닫혀 있는 감옥과도 같다.

아침 일찍 졸리운 눈을 비비며 허겁지겁 아침밥도 못 챙겨 먹고 교문앞에 진입하는 순간 '등교 지도' 선생님과 선도부들이 눈을 부라리며 복장, 두발, 명찰, 빼찌, 심지어는 신발과 가방 색깔까지 검사하며 살벌한 학교생활이 시작된다.

오전 자율학습 잠깐, 0교시 수업 시작과 함께 수준별 학습(우열반의 다른 이름)을 통해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고3이 가까워 오면 음미체 수

업은 온데간데 없다. 가끔 있는 CA, HR은 자율학습(?)으로 변모해 있고 수업이 끝나면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그나마 학교 이후는 학원수업을 가야하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고 만다. 결국 학교는 학원 숙제나 모자란 잠을 보충하는 곳이고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교사의 몫이 아님을 알고 주저앉아 버린다.

학부모는 학교가 아닌 학원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두려움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적은 '옆집 아줌마'가 되고 만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 가끔 일탈을 꿈꾸며 누구누구의 뒷담화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 **서열화된 대학! 입시 공화국의 대한민국의 학교!**

왜 이럴까? 우리의 학교는 대한민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꿈의 서울대, 연고대를 정점으로 입시에 매달린다. 서울대에서 지방대까지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화된 우리 현실에서 모든 평가기준과 학생생활의 양식은 바로 입시 하나에 매달려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내신 중심의 대학 선발 정책과 소극적이거나 3불정책(이른바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정책)이 급격히 무너지는 공교육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무너지면 결국 학교는 입시 학원화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인권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되는 현실이 될 것이다.

### **이제 그마저도 뒤로가는 학생인권의 현실!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이른바 학교 자율화 정책)**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0교시, 야간 자율학습, 우열반 편성이 가져오는 여러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해 왔던 내용들을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을 통해 29가지를 풀어놓았다. '잠잠자자! 밥좀먹자!'라는 구호가 학교와 인터넷에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되는 인권중의 가치인 기본권조차 지켜지기 힘든 학교자율화 정책은 그야말로 이명박 식 실용과 교육 시장화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전에는 0교

시와 야간 자율학습, 우열반 편성이 가져올 문제들이 심각하고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과 학원 시장의 학교 침투가 사교육비를 증가 시킬 것이며 공교육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이제는 학교에서 안할 것 같으니까 풀어놓는 것일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우열반 편성 및 0교시는 향후에도 그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준별 학습을 확대하는 것과 조기 등교 또는 조기 1교시 수업 같은 방식으로 이를 무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사실 자율화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 성숙한 시민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나쁜 말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자율화의 본질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과 입시 중심의 교육문화가 바뀌었을 때 의미 있는 정책이라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결국 지방 교육감과 일선 교장의 왜곡된 권력만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질 것이다.

결국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의 학교는 침해 받고 있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을 구체불능화 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숨겨져 있는 교육 시장화!**

교육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장애를 갖고 있던가 아닌가를 떠나 경쟁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안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는 그래야 한다. 아마도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은 진보적 가치이전에 건전한 보수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해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100m 달리기에서 누구는 50m 앞에서 누구는 50m 뒤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룰일 수 있는가?

영국의 중등교육이 여타 다른 유럽 국가의 높은 공교육의 질과 다르게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도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교육현장의 필요성보다는 70년대부터 이어져온 좌우 정치권의 정권교체에도 한결같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교육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별 수학능력에 따른 차별 지원과 결론적으로 중산층 이상만이 누릴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이 가져온 학교 차별화 정책이 그 문제를 가중시켜왔다.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무능한 교사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 선전이 큰 몫을 담당해 온 것이다.

우리 교육의 흐름도 영국교육의 가치 없는 실용과 수월성을 따라잡고 있

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울산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 학력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 지원을 발표하였다.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별 등급을 통해 보다 좋은 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경쟁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정책이 효능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입시 공화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초·중등 학교를 줄세우는 과정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는 보다 많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불러 올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치 없는 껌데기 세상으로 전화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유권과 맞물려 우리도 모르게 차례차례 교육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 이제 대안을 말할 수 있을까?

인권 친화적 학교의 대안은 있을까?

크게는 학교 민주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교 안의 갈등이 위 두 가지에서 파생되고 있고 그 갈등 과정이 결국 일방적인 권력관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권력의 한 가지는 교장과 교육감의 실체가 있는 권력이고 그 후자는 수 많은 역사와 학벌사회의 사회적 의식 즉, 실체가 없는 권력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것일까?

어느 한쪽에서는 학생인권문제는 결국 입시 중심의 학교 정책과 실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벌 사회를 개혁하고 대학 평준화 운동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은 조금은 하찮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 오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또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학교 현장의 고발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처음부터 그 고민을 다시 생각해 본다.

1. 학교 현장이 왜곡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 문제를 점검하고 진솔하게 알려 나가기
3.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갈등을 양산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요소이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의 시작임을 선언하기
4. 입시 중심의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힌 실타래를 풀어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어른의 역할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 □ 문제인식

-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원칙 아래 지켜져야 한다.
  - 학생인권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수하게 적용되고, 이 때문에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행복’이라는 교육 신화는 그 고통을 영속화할 뿐이다.
  - 학생 개인이 부당한 침해와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예외 없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 낮은 인권 상태에서 높은 인권 상태로의 지속적인 학교 변화는 불가피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및 정책은 학생인권 침해가능성을 높인다.
  -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감시되지 않는 학교와 교실 공간은 학생인권 사각지대로서 기능한다.
  - 학생의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되지 않는 교육 정책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 학교의 교육 행위 자체가 학생인권의 증진이라는 또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인권침해는 제도화되기 마련이다.
  -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상호간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
  - 목표지향 교육활동이 아닌 평가지향 교육활동은 그 자체가 통제와 선발 수단으로 인권 침해적이다.
-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자율화 정책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인권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전봇대가 아니라 신호등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 자율화를 통한 권한 위임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감시는 별도로 증진되어야 한다.
- 자율화는 학생의 교육활동 자유와 이의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재정 등 본질적인 부문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 각 부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행위 원칙

### ○ 중앙정부

- 정치 지도자 및 고위 관료는 국가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인권 증진이 목표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목표 수행을 위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언급하여야 한다.
- 특히 교육정책을 언급함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 교육청과 학교, 교원

-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료와 교원의 권한은 학생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있음을 유념하고, 이를 위한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 학부모의 정책 참여 및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 ○ 교육 영리행위자

- 교육 부문의 영리 행위는 일반 영리 행위와 다른 성격을 가졌음을 이해하고,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 감시와 견제 이전에 각종 협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절제된 영리 활동을 위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 일반 시민 및 학부모

- 시민사회는 정부 및 학교, 교육 영리행위자의 학생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학부모들은 학생 및 학부모의 개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항하고 보호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 이 시기 꼭 필요한 정책 목표 및 수단들

### ○ 자율화 교육정책 평가 및 피드백

- 자율화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발표 및 피드백(국가인권위원회)
- 입법화를 통한 적절한 행정 및 교육활동 규제(예, 10시 이후 교습금지)
- 교육 경쟁 원칙의 확립
  - 교육청간, 학교간 비교육적 경쟁을 방지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창출
  - 특히, 학력신장 목표 아래 수행되는 성적 경쟁에 대한 제어 필요(학력이 아니라 교육력 경쟁이 중요)
  - 대학들의 선발 기제가 과도하고 의미없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어(적격자 선발보다도 교육 목적 회복이 중요)
  - 친인권형 학교 경쟁으로의 전환 ;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서 인정제, 국가지원 무시형 자율학교의 강화

### ○ 인권침해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의 공유 및 실천

- 교과부에 대한 교과서 반영 권고
- 교육청에 대한 학교평가시 반영 권고
-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게재 권고
- 교육정책 담당자 및 교사들에 대한 직무 연수
- 시민단체의 학생인권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지원

### ○ 기타

- 연이은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 및 주민 자구 활동 지원
-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낳은 교육 차별에 대한 감시 호소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단체의 역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 1. 학생인권 법과 제도만의 문제인가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어리다고 이러한 권리가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헌법과 국제규약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단위학교의 학교규정과 각종 규율이 만들어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의 인권수준은 여전히 국제 인권기구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소하게는 소지품조차 맘대로 갖고 다닐 수 없으며 머리를 어떻게 할 지 또는 어떤 옷을 입을 지 무슨 색을 입을 지조차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적절한 의사소통구조가 없다보니 간단히 해결할 문제조차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오히려 감정문제로 비화되어 문제해결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며 이에 따라 학부모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법과 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충분한 조건이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행법으로도 학생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학교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적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과 일선의 지도교사들에 의해 변질되어 규정에 정해진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에 따라 학교에서 보장받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이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인권의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학교장제도의 변화와 학교구성원의 권한 분산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학교장의 인권 의식의 정도에 따라 학교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학교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는 내용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자율과 학교장 권한을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학교장이 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나, 자녀의 교육을 확률에 따른 운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현행 교장 제도가 변해야한다.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학교 구성원인 일반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분산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도 변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은 권력관계이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3. 교육주체의 인권의식의 결여와 체계적인 인권교육필요

인권이란 의미가 각 교육주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헌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등 교육과 관련한 법 등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교육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학교의 모든 규정과 규율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시행과정에서 해석에 따른 각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주체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특히나 당사자인 학생자신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성적순으로 배식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부당한 체벌을 당연시 하는 등 왜곡된 의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를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과정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여야 하며 자라는 과정에 따라 교육해야 한다. 교사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필수화 해야 하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일정기간 마다 연수를 통하여 재교육해야한다. 학부모는 학부모가 되는 동시에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의 삼주체가 학생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면 학생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 될 것이다.

#### 4. 인권교육전담기구의 필요성

학생인권을 담은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특히 학교장 권한이 학교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학생인권교육이 각 주체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각 과정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과 형식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인권위가 되든 교과부가 되든 학생인권교육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기구가 만들어 지기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학부모단체나 교사단체 청소년단체가 이를 나누어 인권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고 필요한 일을 전담기구가 없다고 하여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 학부모의 자녀교육관 변화가 곧 학생의 인권보호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숙환

1989년 UN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아동에 대한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광의의 의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학동기 연령을 아동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대부분의 학생으로 보내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년기 전 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동기인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는 것은 곧 올바른 성년기를 가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째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이 변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인권을 고려한 부모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부모가 훈육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행동을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 한다고 한다. 폭력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폭력이 정당화 될 때 이는 어린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라도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인권을 우선하는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금하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에 대하여 학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청소년기보법, 학교안전사고예방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교육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는 아동 즉 학생의 인권에 관한 범위 및 개념들이 명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학생인권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있는 현실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학부모회 에서는 이러한 학생인권관련 법규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먼저 학생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녀의 인권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자녀의 인권보호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혹은 사회에서 학생 인권이 유린 되는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 하며 행동하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일예로 요즘 학교 내 자율화 실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은 학생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학부모라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왜냐면 0교시 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습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능력 고양만을 염두에 둔 비 인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당연히 하지 말 것이며 학부모 또한 비인권적인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곧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행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넷째 자녀에게 인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인권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녀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그들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 해 볼 것이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 자녀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인권 정보 사이트라든가 관련 서책을 자녀가 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학부모가 되자.

다섯째 학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명예교사, 학교상담실 자원봉사 등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다면 학생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다.

학생의 복지, 학교 부적응 문제 등 학생의 인권문제가 발생 했을 때 학부모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접하며 문제해결에 동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곧 학생인권 보호라고 할 수 있다

# '학생 인권 보장' 법 조항의 실현을 위한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천희완

## 1. 계기 활용의 중요성

어떤 활동을 할 때 좋은 계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시선을 끌어 모으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힘을 단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계기가 있었고 그 때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1989년)과 비준(한국: 1991년), 민간정부의 성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등은 학생 인권 증진의 계기로 삼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법조항을 신설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sup>2)</sup> 이번을 계기로 입법 추진 과정에 참여했거나 법조항에 관심이 있거나 법조항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정부기관이 이 법조항의 사회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조항은 사문화되고 입법 과정에서 활동한 보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법 조항의 실천은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도 행동으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 2. 민주주의 국가의 성격과 법,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군사 정부까지는 국가의 사회계약설적 성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이해가 적었으나 지금은 인권 중심의 이해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시절에 공부를 하였거나 그 시절에 공부한 사람들로부터 배웠거나 과거의 관행적인 습관이 남아있어서

2)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와 같이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데 법 조항은 '학습자'로 되어 있다.

인권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운영하는데 서투르고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민주 국가의 성격과 민주 국가의 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꾸준한 홍보와 교육인데 이것은 학생 대상만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 시민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 3. 민주적 법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

민주 국가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인권 보장을 위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인 법을 준수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하여 만든 법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이를 함께 확인하고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최근에 많이 실천되는 것이 사회 협약인데, 이 형식이 ‘학생의 인권 보장’ 법 조항의 실현을 위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주적 법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의 유력한 방안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이해 당사자나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합의를 통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을 맺고 이를 함께 실천하자는 뜻을 교육 기관 내외(内外)에서 밝히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4. 이해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제 구축과 점검의 필요성

사회 협약을 비롯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하여도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쇠퇴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그 작동 여부와 수준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관련 정부기관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나아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체’를 관련 정부기관, 교원단체, 인권단체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참고하면서 학생인권보장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로 사회 협약을 맺고 이들 기관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협약의 내용 실천을 점검한다면 실질적이면서 유효한 방안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 5. 사회 협약에 대한 의견 제시

사회 협약이 실천성을 갖고 학생의 인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을 맺는다면, 활동력이 다소 높은 중앙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 그리고 개별 학교 단위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둘째, 법 조항 신설이라는 계기로 조성된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관련 정부기관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협약을 맺고 참여 단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협약의 내용은 법 조항에 나와 있듯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서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협약 내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넷째, 협약이 일회성으로 마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 현실 속에서 실천이 점검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체 운영을 한다는 내용도 담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이러한 협약이 학생인권보장의 학교 환경 혹은 사회 환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이 학교와 교육기관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그 내용을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최대한 한다는 내용도 담기를 바랍니다.

## 6. 학교 설립의 목적과 학교 환경 개선의 중요성

학교 밖 기관들은 학교 설립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인권 증진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는 국민의 인권 중 ‘건강과 보건’이라는 인권을 중시합니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군인들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운영됩니다. 학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이 점심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학사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점심 내용과 시간이 정해지고 운영이 됩니다. 수업 중 교수 학습 활동을 우선시하므로 통신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인권 간에 충돌이 발생하며 어느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 간의 대립은 오늘날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려는 모색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 또한 축적되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갈등 상황을 대부분 해결하거나 갈등의 수준을 한층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학교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 지나치게 많은 학습 시간, 비좁은 교실과 운동장, 학생 수에 비추어 좁은 규모의 식당, 화장실 부족 등과 같은 학교 환경이 인권 보장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는 상급관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진우

저는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사에 의한, 학부모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존재 목적은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문자인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학부모는 교육의 근원적인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학교는 어쩌면 ‘교육청을 위한, 교육청에 의한, 교육청의 학교’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학교가 관료제의 말단 기관으로 존재하는 구조 가운데서 그 구조의 맨 밑에 존재하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교사는 학생과의 만남에서 종종 상부 구조의 일부로서 기능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원인을 진단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부의 통제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부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상부의 통제가 강하다는 것은 학교가 교육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 조직으로서의 학교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잘 하는 것보다는 교육 외적인 것이 오히려 더 중시되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떠받치는 주요한 힘은 교장 승진 제도입니다. 교감 평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교육청은 공문으로 학교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위한 평정제도 하에서 학생을 위한 교사가 설 자리는 좁습니다. 이것이 학생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부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교사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고 하는 행동이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형태로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폭력인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관념이 교정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호 소통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살아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행세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은폐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심적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하부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일방 통행식의 관료적 지시와 통제의 문화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교사는 학생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교직에 들어서지만 어느새 자신도 관료제의 일부가 되어 학생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교사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가해자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행정 중심의 학교 구조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존재성을 인식하면서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교사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해법은 역시 2가지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나치게 비대한 상급 기관의 권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상부의 통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일체의 규제와 규칙을 없애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특히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승진을 매개로 하여 학교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입각하여 교장 리더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은 지시와 통제가 아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안에서 학생 인권도 중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여 학교가 자동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안의 또 다른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하나하나의 지침이나 규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회가 존재하지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교장이 거부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평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학교 평가를 할 때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그에 의거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항상 권력의 편에서 보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되면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회가 추천하는 교사를 학생회 지도교사 및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도 소중하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도움이 없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교사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상급 관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기의 제자리를 찾게 될 때 학생 인권도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학교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동덕여자고등학교장 전상룡

최근 국민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오늘 법조항 신설 또한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며 희망적이다. 이 자리를 빌려 법개정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순영 의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곳곳에 학생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특히 일부 교육자들조차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지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힘찬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증진 방안을 두 가지만 제안하겠다.

제안1. 험악한 교육환경으로 죽은 학생을 위해 위령제를 올리자.

인권보장의 기본취지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입시제도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어린 생명들로부터 행복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 학벌사회에 기반을 둔 입시제도가 연간 100여명이 넘는 수많은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죽음을 강요하는 험악한 교육환경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학생인권침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도 서울 'ㄷ'외국어고등학교의 고3 여학생이 성적관련 자살을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생명권이며 이 생명권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주변상황이 자살로 몰아갔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한 판례도 있다.

그렇다면 피어나는 한 소녀가 이 사회와 학교가 성적순으로 차별함으로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가혹한 입시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을 연간 100여 명씩 우리 곁에서 앗아가고 그 수의 몇 십 배가 넘는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마저 빼앗고 있다. 그와 유사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은 거의 대다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피해와 인권침해가 있을까? 외국(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학

생들이 자살을 하도록 몰아가고 그 자살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학생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교육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시 때문에 열패감을 조장하여 예민한 청소년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수많은 형태의 인권침해가 다반사다.

유00과 같은 스무 명이 넘는 무차별 살인도 그런 인권을 무시하는 교육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의 무시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일생을 열등감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입시교육에 대하여 철퇴를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보진영의 관심 있는 분들이 입시제도 개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무관심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단호한 대처를 못했다.

진보진영에서 총력을 모아 어린 생명을 구하는데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하늘로 간 학생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단식이라도 하든가,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여 지금까지 입시제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위령제라도 지내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입시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ㄷ'외국어고등학교의 고3 여학생 자살관련 기사 중에서>(일부)

"알던 친구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얼굴 아는 사이였죠. 학교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뭐 일부로 이야기가 세어나가지 않게 막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김모(고3)양-

"밝고 성격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는 패닉 상태예요. 다들 눈물 흘리고." -이모(고3)양-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후배라 잘은 모르지만 남자친구도 있었고 공부도 잘 하셨다고 하던데, 안타까워요.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 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해요" -심(고2)모, 박모(고2)양-

"아직 죽음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성적비관과 이성문제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죠." -오모(고1)군-

인터뷰에 응해준 모든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그 날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룬 날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최 양이 느낀 부담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학생도 있었다.

"성적 때문에 죽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모(고3)군-

"같은 고3이기 때문에 남 일 같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모(고3)양-

"아무래도 학교에서 성적을 토대로 석차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 게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석차공개가 학생들을 서열화 시킬 뿐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모(고1)군-



학생들은 모두 최 양의 죽음에 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비춰진 것처럼 학교에서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강요는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최 양의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을 해 알리지 않아줄 것을 당부했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해지고 있다.

19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최모양.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제안2. 학교현장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학교홈페이지 익명게시판을 만들자.

과거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관습적인 학교독재를 개선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획득한다면 학생인권보장과 더불어 학생참여의 실현, 체벌금지, 급식개선, 위생문제 등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학생이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반드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경험에 의하면 학생들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학교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함부로 취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거친 표현들이 게시판에 난무한다.)

### \*체벌금지운동 자료---교육은 칭찬으로

	체 벌	칭 찬
배경	보수	진보
변화의 출발점	몸	마음
변화의 대상	너	우리
대상에 대한 관점	통제와 순치의 대상	사랑과 존중의 대상
방법의 난이도	즉흥적, 쉽다	전문적 노력필요. 어렵다.
전문성	전문성없다.	있다.
결과	비민주성	민주성
	보스기질	리더쉽
	외부변화 중시	내면변화 중시
	타율, 목종, 무책임	자율, 참여, 자주적

	불안 공포, 위축, 반발	자신감, 화목 여유, 배려
방법의 특징	위협, 협박, 공포	격려, 존중, 이해
시대성	군주시대(과거)	민주시대(현재, 미래)
상호관계	수직(차별)관계	수평(평등)관계
대상에 대한 태도	동물적	인격적
학생 반응	반항적, 수동적, 소극적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교사의 자세	권위적, 강압적, 폭력적	자율적, 민주적 창의적
효과의 지속성	일시적	영구적
부작용	많다	없다
내분비 변화	아드레날린 증가	엔돌핀증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서는 매년 5월5일 서울교대에서 체벌금지운동을 하고 있다.)

## '학교문제'에 대한 인권맥락적 사고 실험

이우학교 교감 이수광

### 1] 교육인식소(認識素)의 왜곡

당대의 교육현실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권력집단의 약속'은 '장식적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당대인들의 '교육' 관련 인식소(認識素)가 심히 왜곡된 탓이다. 교육담론에서조차 '수월성', '경쟁력', '창의력'이 강조되는 '특정어휘 편집증'이 나타난다. 사회일반의 교육인식 또한 편향적이다. 즉 <공부=학교 공부=교과서공부>, <교과서공부=입시경쟁력확보=명문대학 진학=출세보장=성공적인 삶>의 등식이 상식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교'라고 별다르겠는가? 대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이나 '배움', '실존적 성찰'이나 '자기발견'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방법적·기술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텍스트(교과서)를 매개로 하는 기능적 관계만이 살아 있고, 정작 학생들의 '삶'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는 <학교교육목표=명문학교 입학>이라는 비정상적 등식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인식소의 왜곡은 모순의 연쇄를 낳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꿈의 설정', '배움에 대한 태도', '존재에 대한 자기 고민' 등도 지배적인 인식소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상적으로 표출된 '학생 삶의 반인권성'은 바로 교육인식소(認識素) 문제이자 이를 근거로 형성된 교육문법체계<sup>3)</sup>(혹은 학교운영문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

3) 교육관련자들의 교육관련 행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이는 '일상화된 관행'이 된다. 이러한 '관행'은 일련의 규칙과 절차, 관습 혹은 집합의식 등 모종의 문법체계의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이 어떤 문법체계를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나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의지(Strategic Intent)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컨대, 대학입시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각 고등학교 건물에는 대학입시 실적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현수막은 교육문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상징가치가 높은 특정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가장 상단에 그것도 자극적인 색깔로 기록되고, 그 다음 단에는 In-Seoul대학, 그 아랫단에는 지방거점대학,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기타대학'으로 기록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록 방식은 유사하다. 이러한 '터무니없고 야만적인 공식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무감한가? 특히 유명대학이 아니란 이유로 '쪽팔리게 호출되는' 아이들도 문제제기가 힘차지 않다. 왜 일까? 현재적 교육문법체계의 세례가 강한 탓이 아니겠는가?

## ② '결핍된 삶'의 조직화 - '꿈'의 상실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교육문법은 '교육'을 배반한다. 삶에 대한 성찰, 배움의 즐거움, 깨달음의 경외심은 거세되고 표준화된 텍스트만이 강조된다. 따라서 학습하는 자의 내적 성장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물화(物化)하는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세례를 받는 만큼 '배움이 퇴행하는'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즉 쓸데없는 것 많이 공부하다 보니 정작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할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학습의 부조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욕구를 학습의 주제로 삼기가 간단치 않다. 특히 미리 배워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분절적으로 그리고 교과별로 계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이나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삶이 결핍된 일상경험이 지속적으로 조직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삶'과 '지식'과 '생각'을 연결시키는 훈련과정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성장동기와 학습동기를 자생적으로 계속 충만하게 하여지 또한 사라지게 된다.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 질문이 없는 학생들, 성찰을 두려워하는 학생들, 일상의 자유마저 빼앗긴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곳'의 학생 삶은 가히 초현실적이다. 그만큼 절망적이다.

## ③ '인권친화적 학교'의 원리

'인권친화적 학교'란 교육주체 상호간에 호혜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공공세계를 만들어 가는 학교이다. 즉 학교구성원 상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공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의 대전제는 바로 구성원간의 호혜성에 있다. 호혜성이란 '상호 원조, 협동, 공유, 합의를 포괄하는 교환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을 실질적인 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교육권재학생'(教育權在學生)의 원리도 중시되어야 한다. 교육권(인간적 성장을 위한 배움의 권리)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행복권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정상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학생들은 권력관계상 약자의 위치에서 온갖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이는 대개의 경우는 교육기관의 교육권(教育權)이나 교사의 '教授權'의 행사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권이나

교사의 교수권은 위임받은 권한이란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나 교사의 권한 행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정상을 벗어난 방법'의 동원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문제적이다)

이러한 '호혜성 원리'와 '학습권재학생의 원리'를 중중하는 경우, '학생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가능해 질 것이다.

#### ④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에 대한 상상력

'인권친화적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학교'이어야 하며, 운영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학생에 의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가 '인권친화적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생을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운영시스템을 갖추고, 학교생활을 전반에서 학생들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의 합의와 상호 존중, 협력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관성(Organizational Inertia)으로부터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상상 가능한 과제를 찾아보자.

영역	구체적인 권리목록
학교운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li> <li>• 학사일정 협의권</li> <li>• 학칙 개정요구 및 참여권</li> <li>• 학교운영에 대한 청문회 개최 요구권</li> <li>• 학교평가 참여권</li> </ul>
학습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수업 만들기' 간담회 개최 요구권</li> <li>• '수업운영계획서' 사전 열람권</li> <li>• 수업 만족도 평가권</li> <li>• 선택교과 개설 요구권</li> <li>• '교과주간' 운영 요구 및 참여권</li> </ul>
학생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행사 기획권</li> <li>• 학생회 자율 구성권</li> <li>•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권</li> <li>• 동아리 결성 및 지원 요구권</li> <li>• 학내 집회권</li> <li>• 학생전용 게시판 운영권</li> </ul>

## ⑤ 덧붙이는 말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추구하는 특권을 만끽하는 곳이자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를 매개로한 기능적 관계만이 중시되고, 특정한 삶의 형식(성공에 이르는 길) 만을 강조하는 학교 현실은 반인권적이자 자기패배적(self-defeating)이다.

인간에게는 존재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고자하는 의지이다. 교육의 본령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식학습 역시 존재욕구 실현의 한 방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대개 학교의 운영 모습은 퇴행적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조항이 신설된 현 시점은 이러한 성찰의 적기이다. 엘빈 토플러의 지적처럼 "한국은 단순히 교육제도의 개선 수준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를 바꾸는 수준의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에서는 학습동기의 선진화 및 높은 수준의 배움 실현이 가능해진다. 학교운영에의 참여와 자치의 일상화를 통해 '자기 기획'이 가능해지는 만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풍토에서는 구성원간 관계 리스크(Risk)가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이해의 문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단위학교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은 바로 학교교육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이자 '공동체적 학교'의 전환 조건을 갖추는 일이 될 것이다.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교육과학기술부  
오기열 교육연구사

먼저, 학생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 및 여러 단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14일은 학생인권 보장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 개정·공포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대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 초·중등학교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재확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매진해야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 보호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주체들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단체들 모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다해야 할지 간략하게나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학생을 둘러싼 주체들의 교육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 상호간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한꺼번에 전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인권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하루 아침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가 처한 현실 또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반성 없이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법령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제시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15대 주제를 보듯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분명,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고, 학교 구성원의 꾸준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과제도 있으며, 학교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과부는 당장 모든 인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를 찾기 보다는 학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학생 인권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교육주체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시나브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해 나가는 동시에 범정부적·사회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교육청이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으로서 당면한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장차 바람직한 인권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인권교육의 전도사로, 학생은 인권교육의 학습자로 재탄생될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활동을 통해서,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서, 교사 대 학생, 학생 대 학생 간 인권친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고 습득되어 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헌법과 아동권리 협약의 요건과 정신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개정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주체간 인권 신장 및 의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주체간에 얽혀있던 학생인권 문제라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의 학생과 그 인격체를 보다 성숙된 인격체로 변화시켜야 할 교사간에 새로운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수직적인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전환은 대화와 같은 양방향적인 소통 문화의 회복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양방향적인 소통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정당성이 상실되어 일방향이었던 학교규율이나 교육활동을 재정비하고,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교육주체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로서의 교원이 또다른 주체인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화 방식이 양방향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홍보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교과부나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및 각종 교원연수 시에 인권관련 강좌와 연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들 스스로도 학생인권 관련 동호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학생인권을 증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에서 교과부의 역할과 노력할 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면관계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대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모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인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간의 학생인권 관련 문제점들이 잘못된 학교문화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인권 문제가 소수에 의한 것이든 다수에 의한 것이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성숙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불과 10여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가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가 10여년 전에는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되었을까요? 분명 짧은 시간의 흐름과 그간의 수많은 학생과 관계자들의 몸부림과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5대 주제가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많은 시간과 수많은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학생인권 관련 15대 주제도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에 필요한 단계와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했던 토론이 10년후에는 모두 보편타당한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 변화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게도 구성원간의 진통과 그러한 진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 등 정신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름답게 날개짓 하는 호랑나비를 보기 위해 번데기 시절을 기다려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외부의 자극도 필요합니다.

오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교가 스스로 날개짓 하는 호랑나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더 아름다운 호랑나비로 변모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학생 개인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거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보편타당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가기 위한 교육주체간의 발전적인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토론한 주요 주제들이 학교 현장을 옹아매는 울가미가 아니라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교육주체 스스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학생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문병호 사무관)

### I. 들어가는 말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못하여 자주 병원에 입원합니다. 몸이 아파도 학원을 다녀야하고, 그래서 학업성적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학원을 다닙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좋은 꿈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몸이 지쳐도 학교와 학원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찾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년 ○○○학생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을

보면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정부정책 추진자, 학교, 교사 등의 입장에서 정책이 논의·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을 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때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되며,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II. 현 황

UN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입양, 학대, 노동, 성착취, 결혼아동보호, 차별금지 등 보호권<sup>4)</sup>은 준수되고 있으나 의사표현, 사상·종교·양심의 자유, 휴식권, 명예권, 건강권 등 자유권<sup>5)</sup> 보장은 미비한 실정이다.

자유권의 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 또는 “학교의 소속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성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사례를 보면

첫째, 부모들의 이혼 시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권리 보다는 父에 의한 자녀의 선택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둘째, 학교의 징계규정은 각 학교별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 처벌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학칙에 대하여도 교사마다 기준적용이 달라 학생들의 권리보장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4) 보호권(협약 제18조 내지 제40조) : 입양, 학대, 노동, 성착취, 결혼아동보호, 차별금지, 소년범 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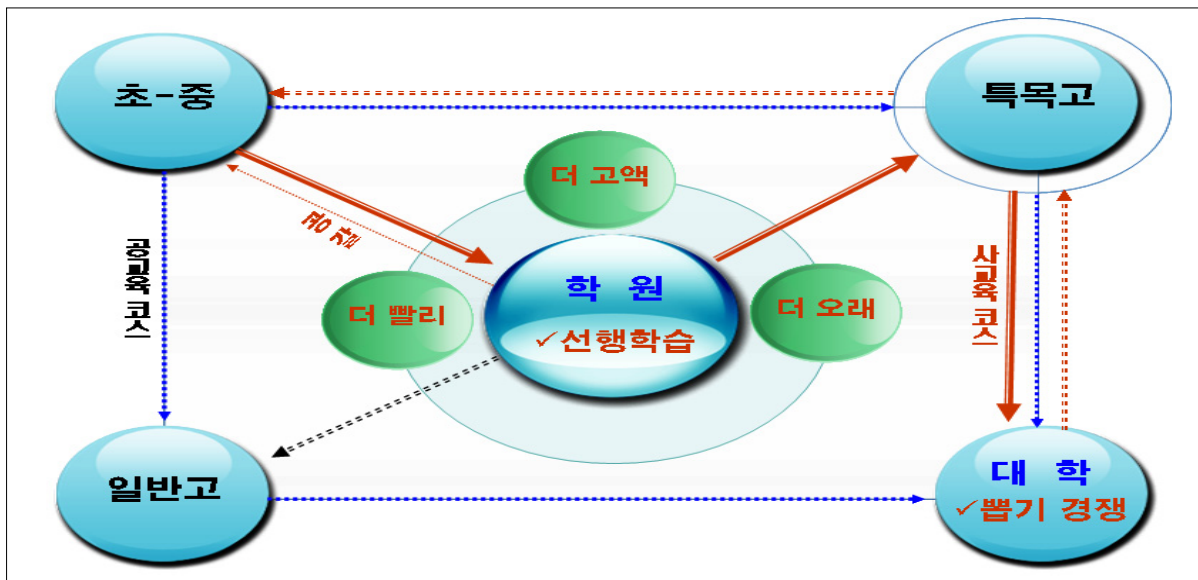
5) 자유권(협약 제2조 내지 제17조) : 의사표현, 사상·종교·양심의 자유, 휴식권, 명예권, 건강권 등

가지고 있다.

셋째, 학교간의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할 의무에 의한 경쟁 보다는 “학생들 간의 서로 경쟁”을 통하여 명문대학을 보내고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도 의무와 권리가 뒤바뀐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학원의 심야교습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경쟁 개념도>



넷째, 우리나라의 학칙은 “하지말라”의 규정이 대부분이나, 선진국의 경우 “홈칠 권리가 없다. 누구도 학교에서 자기 종교를 나타내거나 선전할 권리가 없다.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 등 “규제보다는 ”의무“ 위주로 학칙이 되어있다.

### III.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방향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인권을 논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교사들에게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사에게 최선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둘째, 학생들이 경쟁에 의하여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스스로가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학생징계 규정을 동일화하고, 처벌 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보호 정책을 재조명해야 한다.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각 기관(단체, 교원, 활동가)의 역할

용산고등학교 송요원

※ 이 의견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토론자의 개인 견해임

## 1. 학생의 기본적 인권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두발(염색, 펴머 포함)의 자유, 용의 복장(피어싱, 장신구 포함) 자유, 체벌금지, 휴대전화 압수 금지, 소지품이나 사물함 수색 금지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집회 자유 등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교가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교육 목적(사명)을 위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해야 하는 때에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이것과 관련된 학교의 제한행위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11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고 2005년 5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두발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에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면도 있지만, 세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편향적인 권고를 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는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공공복리(학교의 교육목적

또는 사명)를 들어,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로 제한해야만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입법권자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6)</sup>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학생들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 2.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

### 가. 각 주체의 일반적인 역할

첫째, 학교당국과 학부모/보호자와의 공조에 대해서다. 어느 나라든지 학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결손 가정이 늘어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방치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부유층 가정 가운데에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든지, 자기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과잉보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보호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부모/보호자와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부모들이 바람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상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범위에 대한 토론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학부모/보호자들도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6) 일본에서는 학교를 부분사회라고 보고 있다. 부분사회란 전체사회의 일부로서 특수한 기능적 특수성을 갖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군인, 공무원, 학교 사회를 말한다. 일반사회와 다른 분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회(부분사회)에 머무는 동안 그 사회가 요구하는 테두리 내에서 일반사회에서 누리는 권리를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테두리 내(부분사회)에 들어가면 기능적 특수성 때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반 시민 사회 가운데에서 이것과는 별개로 자율적인 범규범을 갖는 특수한 부분 사회가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법률상의 계쟁(다툼)과 같은 것이 일반 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머무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인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재판소의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국·공립이나 사립을 불문하고, 학생의 교육과 학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연구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학칙 등에 의해 이것을 규정해 실시할 수 있는 자율적·포괄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일반 시민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부분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부분 사회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모든 계쟁(다툼)이 재판소의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 昭和34年(オ)第10号 昭和35年 10月19日 大法廷 判決·最高裁判所 民集 14卷 12号 2633쪽 참조.



둘째,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다. 학생들은 단순한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이해에 대해서다. 기본적인 권리는 내심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인 권리가 존재하는가 하면, 대부분은 상대적 권리이다. 기본적인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통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어느 나라든지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른 성인과 달리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확한 권리 보장과 제한에 대한 논리나 이론을 습득하여, 평소의 교수·학습이나 학생지도 및 학교 운영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은 상식 차원의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 부모/보호자, 시민단체 또는 다른 정부기관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은 교원들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심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당국이 학부모, 학생, 교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나. 교육청의 역할

첫째, 인정도서에 대한 것이다. 모든 교원들이 학교생활이나 교과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권리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수·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적 특성상—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내용만을 교수·학습하려고 하는 특성상—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권리에는 보통 의무나 책임이 따르는데, 양면을 동시에 학습하게 하여 균형잡힌 인권관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의 내용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정도서로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이라는 교과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인정교과서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라는 도서를 제작하고 이를 단위 학교에서 교육하게 함

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관을 심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것이다. 요즘 교육과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정부 기구도 있다. 그들은 학교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 가끔 그들은 학교나 교육당국에 가치편향적인 주장이나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경우 학교나 교육청의 여러 부서가 그것에 매달려 교육력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은 인권과 교육의 양면에 걸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어 그들의 올바른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편향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기관에는 인권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에는 ‘인권국’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폭력대책팀’이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이와 같은 부서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청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인권과(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사안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 정책협의를 요청함으로써 교육전문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의 교육적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학생들의 생활규정이다. 이것이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부합되는 학생생활규정과 그 지침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학생생활규정을 번역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생활규정에서 발견되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고, 우리나라 전통과 현실 및 법 감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법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안해야 한다.

### 3. 제언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은 법률에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에 대한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주 교육법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현실적으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제한할 기본적 인권의 항목과 내용을 명령이나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모두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 취지는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학교에 맞는 생활지도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특정한 생활지도를 하면, 때때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러한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장이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지도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반발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상 모든 학생들이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관계된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명령이나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명령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통해 학부모나 학생을 설득하면, 학교는 큰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조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구(舊) 교육법의 ‘정학’, ‘퇴학’이라는 징계 제도를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으로 바꾼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에 큰 영향을 준 독일에도 이러한 징계제도는 없다. 독일에는 사회봉사를 부가형(附加刑)이나 선택형으로 부여하는 학교가 몇 곳 있지만, 본래의 징계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를 시행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sup>7)</sup>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학교법 제90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사회봉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주에 있는 플라시두스-렌츠 학교 규정에서 징계에 대한 선택으로 ‘사회봉사’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로서 ‘사회봉사’ 제도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관리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학생이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이 문제라고 한다. 프랑스도 징계제도를 ‘정학’, ‘퇴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8)</sup> 핀란드도 동일하다.<sup>9)</sup>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과 같은 새로운 징계제도를 제정하려면,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징계 받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인적·물적 조건을 갖추 수 있는지와 같은 현실적 여건 또한 미리 살폈어야 한다. 현재는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을 보낼 시설이 마땅하지 않고, 시설에 보냈더라도 학생들이 그 시설에 가서 편하게 지내다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로서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셋째, 교육시민단체의 운동도 학교를 도와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주나 흡연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적발하고 금주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책임은 사회에 있다. 성인들은 담배나 술을 판매할 때 반드시 구매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사

7)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35~36쪽.

8) 위의 책, 185쪽 참조.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220~221쪽.

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접할 수 있다. 음주나 흡연한 학생을 적발한 학교는 학생들이 어디서 그것들을 구입했는지를 추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사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들의 잡무가 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2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안)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중 발췌)
-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